

‘전동킥보드 화재’ 벌써 2명 목숨 잃어

최근 이용자 급증...9월 광주서 사망사고도 발생 소방청, 배터리 충전시 주의...인증 제품 사용

최근 길거리에 자전거와 함께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소방청은 전동킥보드 이용자 숫자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은 2016년 6만여 대에서 2017년 7만5000여 대로 늘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2년에는 20만대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소방청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에 의하면 지난달 12일 2명이 사망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파트 화재는 현관문 쪽 거실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화재로 유일한 탈출구인 현관문이 막혀 50대 부부가 피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또한 올해 6월12일에도 대구 중구 고시원 방 안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과열되면서 불이나 지체적으로 진화된 사례가 있었다.

201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동킥보드 화재는 총 17건이다. 사망자는 총 2명이 발생했고 32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 14건 (82.4%), 교통 사고 1건 (5.9%), 미상 2건 (11.8%)이었으며, 전기적 요인의 세부요인을 분석했을 때 대부분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전동 킥보드 사용 주 의사항으로 △안전장치가 장착된 인증제품 사용 △충전 시 자리 비우거나 취침시간에 충전하지 않기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하지 않기 △충전 완료 시 코드 빼기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 및 우천 시 사용하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먼저 전동킥보드 사용 시 과충전 보호장치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인증제품을 사용할 것으로 권고했다. 최근 전동킥보드의 숫자

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인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충전기 연결 시 접촉된 방향에 맞게 정확히 연결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코드를 빼야 한다.

아울러 지난달 광주 화재 사례처럼 화재가 출입구에서 발생하면 거주자는 피난할 수 없기 때문에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충전 시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자는 시간대에 충전을 하지 않고,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충전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구매 시 반드시 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사용 중에는 정기적으로 구매처 또는 수리점을 방문해 전동킥보드와 충전기를 점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뉴스

향에 맞게 정확히 연결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코드를 빼야 한다.

아울러 지난달 광주 화재 사례처럼 화재가 출입구에서 발생하면 거주자는 피난할 수 없기 때문에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충전 시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자는 시간대에 충전을 하지 않고,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충전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구매 시 반드시 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사용 중에는 정기적으로 구매처 또는 수리점을 방문해 전동킥보드와 충전기를 점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뉴스



외국인 노동자들의 외침 20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 폐지 등의 구호를 담은 공을 굴리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환경부, 나주SRF발전소 갈등 키우고 나몰라라”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갈등과 관련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광산갑)은 18일 “민관거버넌스가 약속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조사 결과 유해물질 배출이 범정기준치 이하로 나왔더라도 주민수용성 조사결과 LNG로 연료전환이 결정된다면 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실비용 예상치는 발전소 매몰 비용 1500억원, 광주지역 SRF 반입 철회에 따른 배상액 2500억원, 향후 발생이 불가피한 운영손실액 500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정책실패 때문인데 지지체나 지역난방공사에 이 손실을 부담하라고 할 수 있

냐”며 “주민들이 나주SRF를 반대하는 이유는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며 그래서 나주 시민들도 환경부가 나서라고 요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 나주 SRF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환경부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냐”면서 “심지어 민관협력 거버넌스에도 참여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손실보전 문제만 해결되면 LNG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국가 폐기물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도 아무 상관 없냐”면서 “폐기물 에너지화 포기하고 단순소각과 매립만 할 것인지? 환경부가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을 만나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에 충전을 하지 않고,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충전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구매 시 반드시 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사용 중에는 정기적으로 구매처 또는 수리점을 방문해 전동킥보드와 충전기를 점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뉴스

강진서 승합차 수로에 빠져...3명 중 · 경상

19일 오후 2시52분쯤 강진군 군동면 한 도로에서 A씨(72)가 몰던 승합차가 인근 수로에 빠졌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A씨와 동승자 2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완도항 해상서 60대 익사자 발견...해경 수사

완도항 내 해상에서 변사자가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45)는 전날 오전 7시36분쯤 완도항 내 안벽과 선박 사이에 얽혀 있던 상태로 끼어있는 B(68)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완도해경과 소방당국은 신고 11분 만에 B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B씨는 통영에 거주하며, 익사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폭발물이 묻혀있다” 익명 제보...군 조사

무안군 한 텃밭에 폭발물이 묻혀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무안경찰서와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한 텃밭에 폭발물이 묻혀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다.

군과 경찰은 합동으로 텃밭을 수색, 낙하산 신호탄과 연막 수류탄 등 군용품 60여점을 발견했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텃밭은 군 예비역 중령 A씨의 소유로 확인됐고 A씨가 “20년 전 중대장 시절 군용품을 반출해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A씨를 상대로 군용품 절도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군용품 출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료 2명 찌르고 달아난 불법체류자 검거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이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0)가 이날 오전 9시쯤 경찰에 지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거리에서 러시아 출신 B씨(34)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C씨(23)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C씨는 각각 팔과 다리를 찔렸지만 병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왔다”는 이유로 B·C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7년 입국해 현재는 비자가 만료된 상태이며, 범행 직후 전북 전주와 부산 등지에서 지내왔다고 설명했다.

쓰레기 2300톤 불법투기 조직 총책 구속

농촌 지역의 땅과 창고를 빌려 쓰레기 수천톤을 무단으로 버려 온 일당의 총책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붙잡힌 30~40대 남성 4명과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광주와 전남 담양·장성·영암에서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 약 2300톤을 불법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수집책, 운반책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고물상을 하겠다’며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논밭이나 건물을 빌리면, 수집책이 시세의 50% 가량만 받고 쓰레기를 모았고, 운반책은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려 왔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